

테마칼럼

대형세계

정치브리핑

경제의 눈

문화양자

반(反) 기업 정서



조담

해외여행에서 한국 기업의 전광판이나 제품을 발견 할 때에는 누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느끼면서도 막상 우리 땅 안으로 들어 오면 그 긍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반기업정서가 다시 고개를 쳐든다.

대한민국에서 관찰되는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반(反) 기업정서가 아닐까 싶다. 해외여행에서 한국 기업의 전광판이나 제품을 발견 할 때에는 누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느끼면서도 막상 대한민국 땅 안으로 들어오면 그 긍지는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반 기업정서가 다시 고개를 쳐든다.

일상생활 속의 대화에서 기업이나 기업가를 칭찬하는 말은 정말 들어보기 어렵다. 아마 정치인을 매도하는 대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기업을 비난하는 대화일 것이다. 기업이 오직 착취, 사기, 불법만을 행하는 존재 정도로 묘사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지식인일수록 더 많은 사례와 논리로 반기업 정서를 표출한다. 대통령도 후보 때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하지만 일단 취임하고 나면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놓고 무언가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은근히 동조한다.

이런 현상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어떤 원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기업, 특히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기업 정서의 부담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필자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최근 어떤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는 반기업 정서에 또 한번 불을 지핀 결과

가 되었다(여기에서는 그 변호사의 출신지역과 관련된 후문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대통령선거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을 겨냥한 그의 폭로는 실제적 내용의 중요성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국회는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법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폭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을 둘러싼 의혹은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 그 이전에 그런 의혹의 여지를 남겨 놓은 삼성의 경영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적응적 존재라는 원론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를 철저히 존중하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실과 정직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아마도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은 훨씬 적을 것이고 삼성을 둘러싼 최근의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은 책임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주어서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책임을 마련하고 책임을 제공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비리와 불법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의 일부로 저질러진 것들이라는 사실

이다. 기업의 비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후도 없다. 오히려 기업 비리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철저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더 도덕적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는 일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 반기업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집단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기업과 그 경영자가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복제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이 그러함 꼬여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경영실적을 개선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골치 아프다고 스스로 여길 정도인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보여준 역동적인 모습은 신기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경영자를 좀 더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 주면 좋겠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인권 침해 논란 끊이지 않는 정신병원

광주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학대하는 하반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등 반인권적 환자관리를 했다고 해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침대에 묶어 놓은 채 확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강제 입원시킨 광주 C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원무 팀장 등 4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C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인륜적이다. 중증 정신지체자인 청소년을 대소변 냄새가 나는 침대에 묶어 놓고 4개월간 방치·학대했다. 또한, 50대의 알코올 중독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개월 동안 강제 입원해야 했다. 병원 측이 법적 보호의 무자아 아닌 미성년자 딸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입원시킨 것이다. 지난해 1월에 는 폐업한 병원의 환자 30여명을 본인 및 가족 등의 등 적법한 입원절차 없이 강제로 이송했다.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례 10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이 정신병원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 기관의 관리 소홀과 폐쇄적인 병원 운영에서 비롯된다. 지자체는 매 6개월마다 환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원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비교적 조용한 곳에 병실을 갖추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치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악용해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신병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격리시켜서는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 다. 강제입원과 폐쇄적인 병동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도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정부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 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에 결핵의 의원들이 예산안을 핑계치고 선거운동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헌정사상 초유의 중예산 편성 사태를 우려하며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예산안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해 중예산 편성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정부는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직접 고용사업이 중단돼 25만명이 실직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민 등이 피해를 입고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적이 아니더라도 법정시한을 어긴 국회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기국회의 기본책무는 예산안의 심의의결이다. 말로는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정치권이 나라살림을 꾸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에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법정시한까지 넘긴 채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과립 처한 행위다.

예산안은 대선과 분리 처리돼야 한다. 당리당락에 묶여 25만명이 실직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그 책임은 정치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겨울의 길목에서, 노랗게 물들여가는 은행나무를 본다. 수북이 떨어진 은행 앞에선 "사각사각" 아우성이 들린다. 덧없이 한해가 지나가고, 추위가 저만치 다가왔음을 알리는 소리다.

다노란 은행 이파리를 주위 색깔조에 하나하나 끼워넣던 추억을, 당신은 기억하는지. 확장시절의 이 '의식' 속엔 기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 잘 쓰지 않는 은행잎에 살균·살충 효과가 있어 서적을 보관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잎이나 화분을 집안에 두면 개미·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은행나무는 피복이 하나 없는 1속 1종의 외로운 나무다. 수나 무에서 낳아온 꽃가루가 있어야만 암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암수가 떨어지는 거리는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표현된다.

하어, 옛 사람들은 사람의 징표로 은행잎을 선물하며 나눠 먹었다. 날이 어둑해지면, 연인들은 동구 밖에 있는 은행나무를 돌면서 아련한 마음을 전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축제'를 구상했다. 시목(市木)인 은행나무 기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 잘 쓰지 않는 은행잎에 살균·살충 효과가 있어 서적을 보관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잎이나 화분을 집안에 두면 개미·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은행나무는 피복이 하나 없는 1속 1종의 외로운 나무다. 수나 무에서 낳아온 꽃가루가 있어야만 암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암수가 떨어지는 거리는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표현된다.

하어, 옛 사람들은 사람의 징표로 은행잎을 선물하며 나눠 먹었다. 날이 어둑해지면, 연인들은 동구 밖에 있는 은행나무를 돌면서 아련한 마음을 전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축제'를 구상했다. 시목(市木)인 은행나무 기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 잘 쓰지 않는 은행잎에 살균·살충 효과가 있어 서적을 보관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잎이나 화분을 집안에 두면 개미·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은행나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류상완



지난 6월에 인기사극에 출연했던 모 여자 탤런트가 '대동맥 박리증'에 의해 55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혈관이다. 가슴이나 복부부위 대동맥의 안쪽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틈새로 심장에서 바로 분출되는 높은 압력의 혈액이 계속 파고 들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혈전(피떡)'이 생기거나 심하면 파열돼 사망하게 되는 대동맥 박리증.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70~90%가 고혈압

진행과 함께 발생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 차이가 있다. 뇌혈관이 나오는 대동맥궁 이하의 하부대동맥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혈압 조절 및 통증 관리 등의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동맥 내에 스텐트를 삽입해 찢어진 부위를 막는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증상이 계속 진행돼 혈압이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파열이 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생 1개월 이내에 전체 환자 중 92%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 관리, 추운 날씨엔 더 신경 써야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동맥 박리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오는 환자들을 보면 평소엔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었지만 고혈압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경우가 많다.

대동맥 박리증 역시 다른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쌀쌀한 날씨에 많이 발생한다. 앞가슴이나 등을 칼로 도려내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런 흉통은 심근경색증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심근경색증보다 더 급격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대동맥 박리가 진행되면서 뇌로 가는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뇌혈류가 차단돼 의식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으며, 심장 쪽에서 박리가 진행되면 심부전이나 심근 경색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각종 장기로 가는 동맥부위의 침범어부에 따라 신부전, 하지 마비 그리고 장이 썩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심근보호법 및 뇌 보호법의 발달과 인조혈관의 개선, 그리고 수술 전 후 환자관리법이 발달해 발생 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대동맥 박리증에 의해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신부전, 장 괴사증 등이 발생하면 수술 후에 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예후가 나빠질 수 있어 발생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동맥 박리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평소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조심 추운 날씨에는 고혈압의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오전 중에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피해야 한다.

또 과음이나 흡연을 하게 될 경우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해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래로21병원 흉부외과 원장>

기고

전승현



여수가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됨으로써 전남도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했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고, 남해안권의 선진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전남지역 SOC확충 사업은 '수요가 부족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아예 제외되곤 했으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사의 사업기간도 계속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달 27일, '세계박람회'라는 초대형 사업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자가 등록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 등에는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의견을 올리는 대부분의 네티즌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모르고서 허위사실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떠도는 소문을 듣고 아무 글이나 올렸다가 자칫 남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게시물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 사안이 중대할 때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위법한 게시물을 대한 과장도 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을 자제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엑스포 가는 길 우리 손으로

확정됨으로써, 전남 그리고 여수권의 대규모 SOC의 확충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 남은 4년여 동안, 국내 어느 곳에서든지 남도의 미향 여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사업중에는 호남고속철도 여수 연장, 목포~광양 고속도로 개통과 전주~광양 고속도로 여수 연장 개통, 여수~고흥 국도 77호선 전 구간 해상연결 개통 그리고 기존에 운영중인 무안 국제공항과 여수공항에 미주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장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신규사업으로는 무안공항~나주~순천을 연결하는 중부권 도로망 확장, 완도~고흥 지방도 해상연결 기반 구축,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남해고속

도로 연결망 확충사업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2012여수박람회까지는 4년 만 정도가 남았지만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같은 SOC확충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세계 150여 개 국 800여만명의 관광객이 엑스포가 개최되는 3개월간 여수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여수박람회에서는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랜드마크(Land Mark)'가 만들어져야 한다. 올 연말 통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비방도 처벌 받는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들릴 때마다 짜증이 난다. 특히 자녀들은 휴게소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싶어 하는데 대용량 과자만 팔기 때문이다.

집 앞 슈퍼, 편의점에서 300원, 500원, 7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과자류도 휴게소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2천원, 3천원짜리 과자들 밖에 없다. 똑같은 종류라도 대용량만 판매하는 것이다.

량만 판매하는 것은 장사속도밖에 생각할 수 없다. 휴게소에서 들러 먹고 싶으면 사먹고 아니면 말라는 식 아닌가.

아이들이 사달라며 조르는 데 안사주기도 힘들다.

고속도로에서 사실상 독점 영업을 하는 휴게소 판매점의 이같은 영업 행위는 소비자들보다 자신들의 편의와 장사속만을 고려한 행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포장이 아닌 대용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dvertising rates.